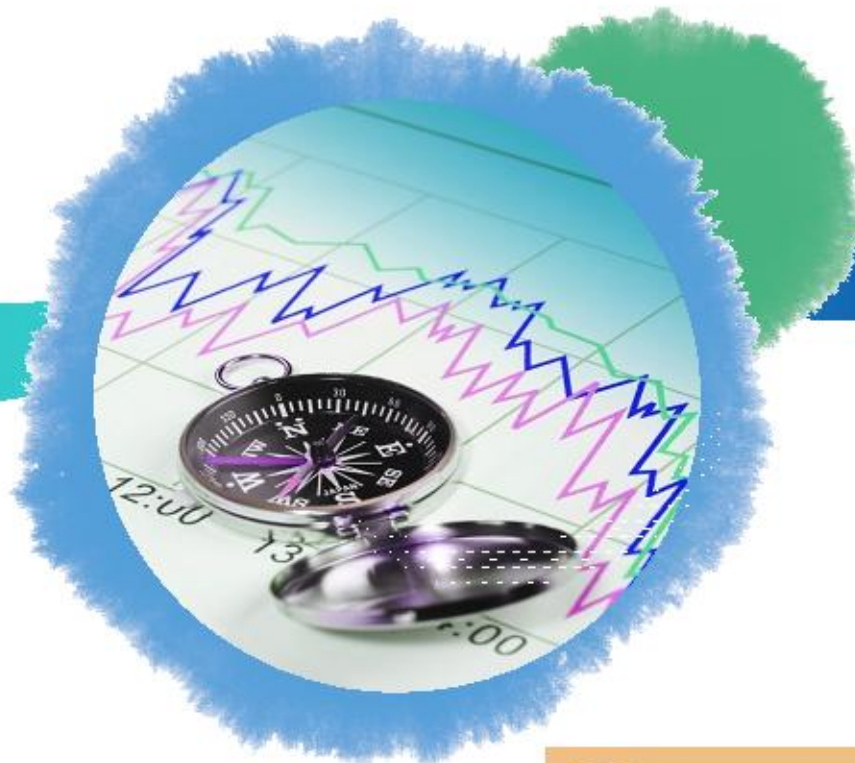


Session 1 발전모형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복지체제 구축방안

- 2009. 10. 18
- 안상훈, 이재열 (서울대)



사회적 자본과 사회의 질, 그리고 복지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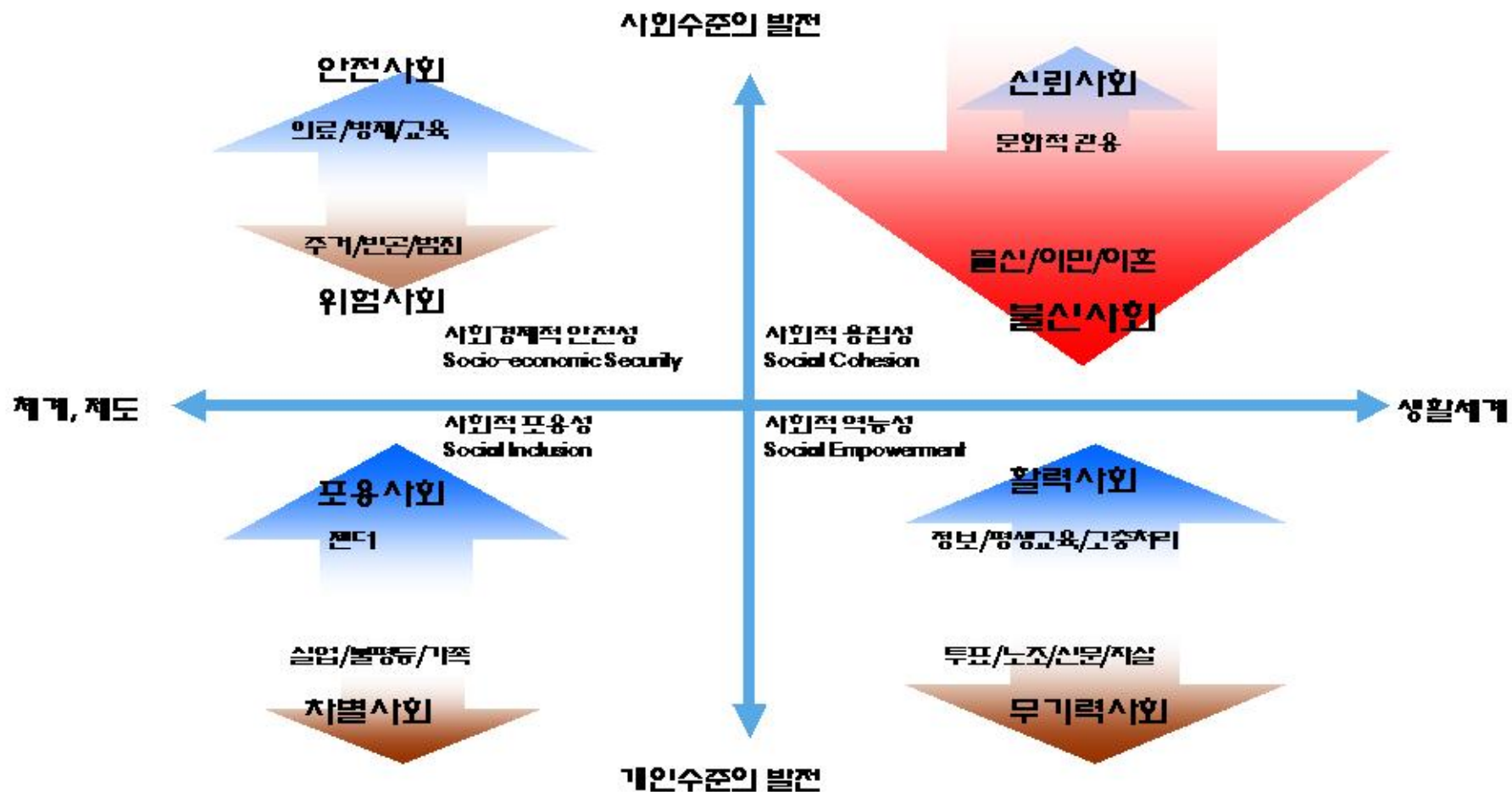
1. 사회적 자본

1. 불확실성을 줄여서 사회성원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자산
2. 개인의 후생 수준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 등 경제적 성과, 그리고 사회통합 등 사회적 성과에 결정적인 역할
3. 예컨대,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할 때 1인당 GDP가 7.1% 증가
 -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인 0.44 수준으로 완화될 경우 1인당 GDP는 2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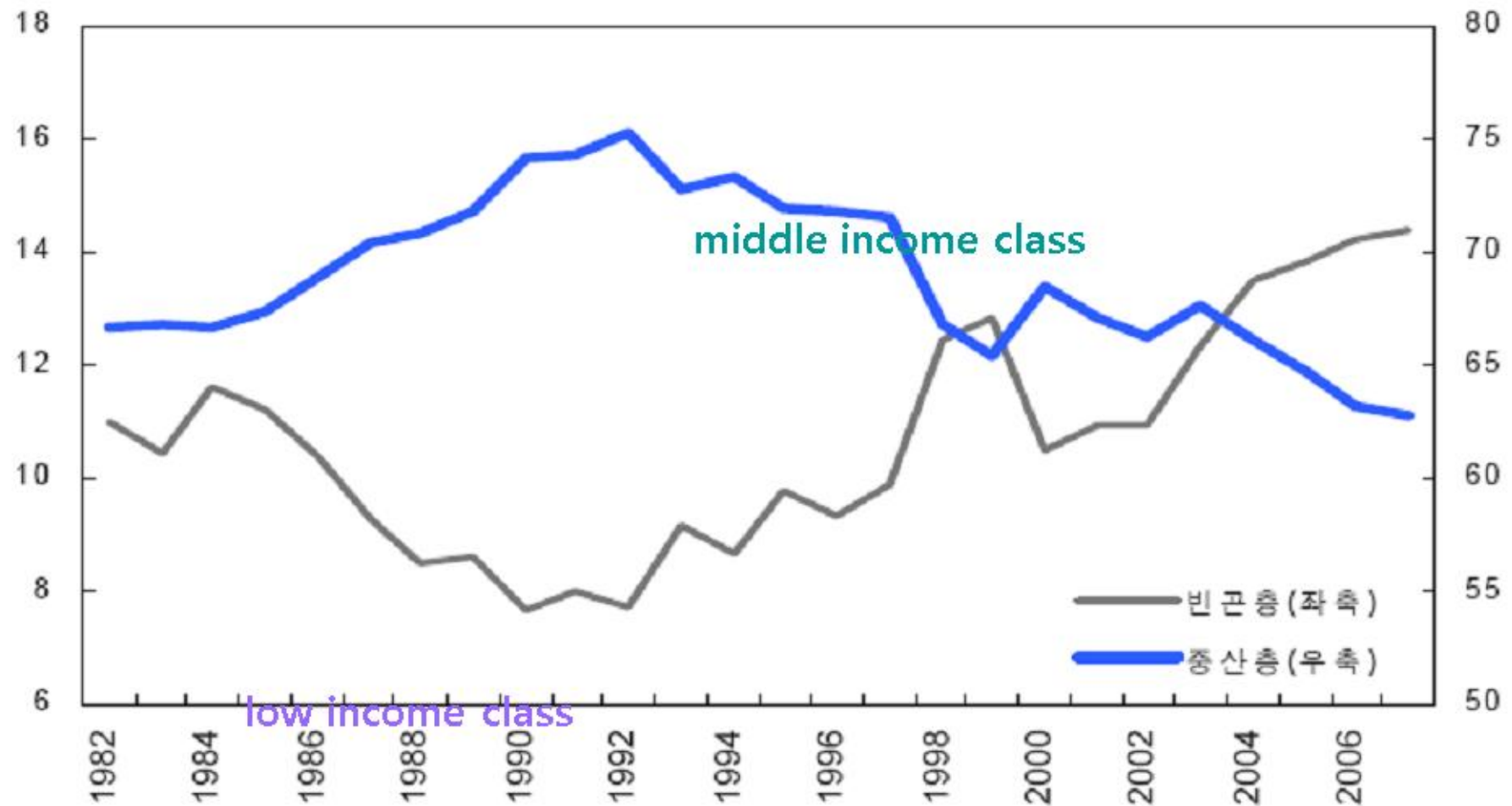
2.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을 경우, 경제, 사회, 환경 등 총체적 사회의 질이 저하

1. 규범, 제도, 신뢰의 중요성
2.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복지부분의 재구조화와 성장을 통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

불신 때문에 더 심각해진 사회의 질



중산층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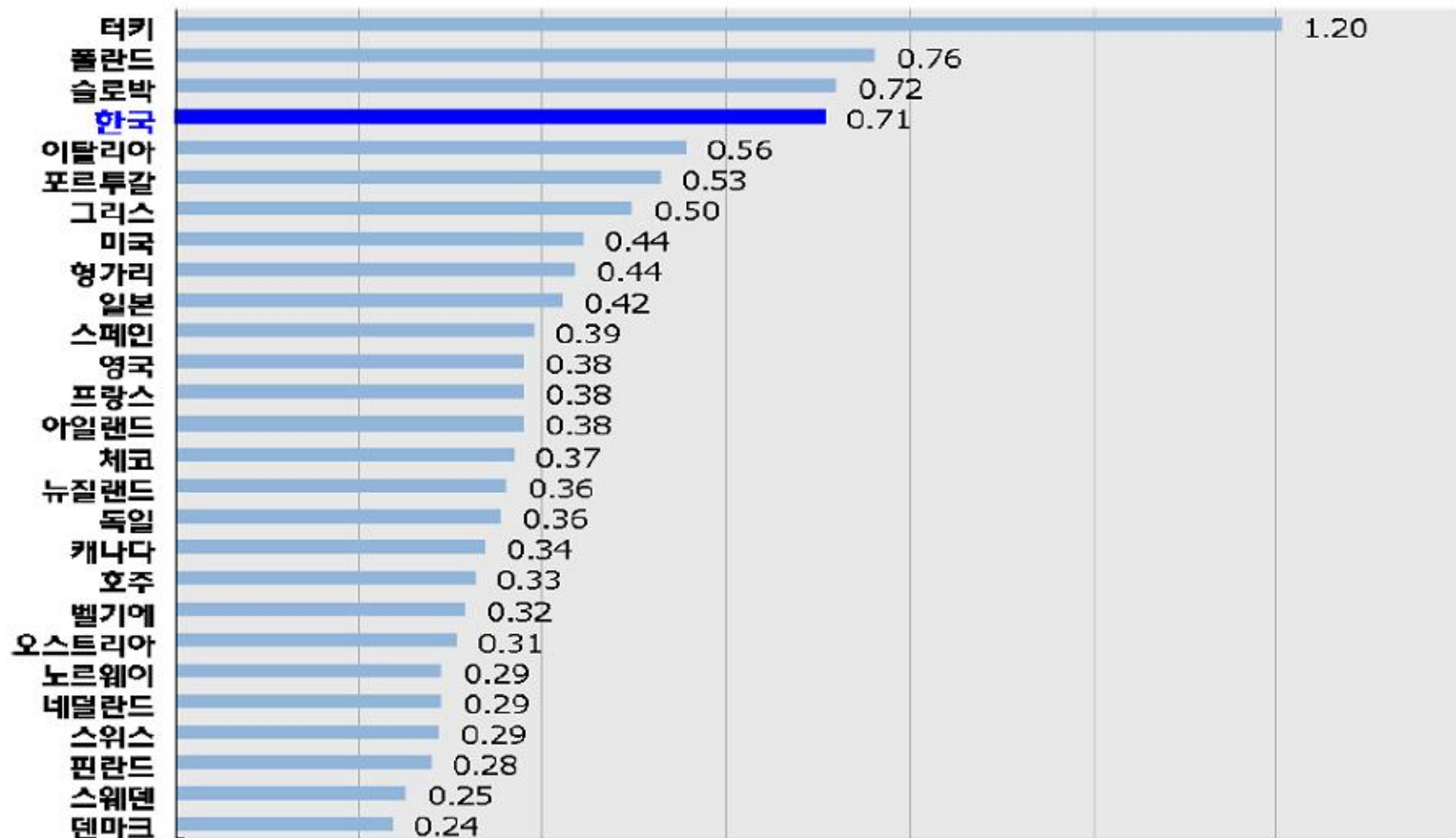


- middle income class (50-150% of median income)
- low income class (less than 50% of median income)

사회갈등지수

$$= \text{지니계수} / [(\text{민주주의지수} + \text{정부효과성}) / 2]$$

사회갈등지수의 국제비교



박준, 김용기, 이동원, 김선빈.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2009. 6.24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의 원칙

1. 20세기 복지국가의 종언과 복지국가 구성의 균형창출
2. 균형적 복지체제 구축의 원칙들
 1. 생애주기적 균형
 2. 전국민을 위한 수급균형
 3. 현금이전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4. 소극적·적극적 보장의 균형
 5. 보완적 공사역할분담
3. **사회서비스 강화**와 활성화 전략, 그 생산친화성 일자리 창출
 1. 인적자본 증대
 2. 공공부문에 의한 규모의 경제
 3. 예방적 가치재
 4. 산업구조조정 촉진

사회서비스가 인당GDP(좌) 실업률(우)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자본투 지	166.0 (0.013)	220.0 (0.00)	175.6 (0.010)	130.2 (0.054)
노동력	201.7 (0.00)	189.6 (0.00)	196.3 (0.00)	151.5 (0.00)
불기	-280.1 (0.00)	-305.7 (0.00)	-267.1 (0.00)	-214.1 (0.00)
무역수 지	98.2 (0.131)	139.9 (0.028)	116.3 (0.086)	99.3 (0.161)
정부소 비	-165.1 (0.00)	-	-176.0 (0.02)	-199.7 (0.014)
총사회 지출	-	-126.6 (0.006)	-	-
연금이 전	-	-	-15.1 (0.660)	-
사회서 비스	-	-	-	111.8 (0.006)
상수항	6762.8 (0.015)	6153.4 (0.075)	7839.9 (0.066)	7414.8 (0.024)
R ²	0.989	.990	0.9872	0.972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노동수요	-9.052 (0.222)	-8.806 (0.263)	-7.684 (0.295)	-3.120 (0.672)
실질이지 율	0.153 (0.122)	0.138 (0.163)	0.162 (0.098)	0.081 (0.375)
생산성	-0.210 (0.050)	-0.200 (0.067)	-0.232 (0.029)	-0.134 (0.147)
불기	-0.166 (0.053)	-0.147 (0.099)	-0.154 (0.068)	-0.181 (0.020)
정부소비	0.534 (0.000)	-	0.465 (0.002)	0.542 (0.000)
총사회지 출	-	0.292 (0.045)	-	-
연금이전	-	-	-0.087 (0.065)	-
사회서비 스	-	-	-	-0.263 (0.000)
상수항	7.218 (0.249)	10.363 (0.045)	12.938 (0.056)	11.425 (0.039)
R ²	0.5251	0.6013	0.5584	0.5939

주: 표의 첫째 줄은 회귀계수, 둘째 줄 괄호안은 p값임.

복지국가의 유형별 성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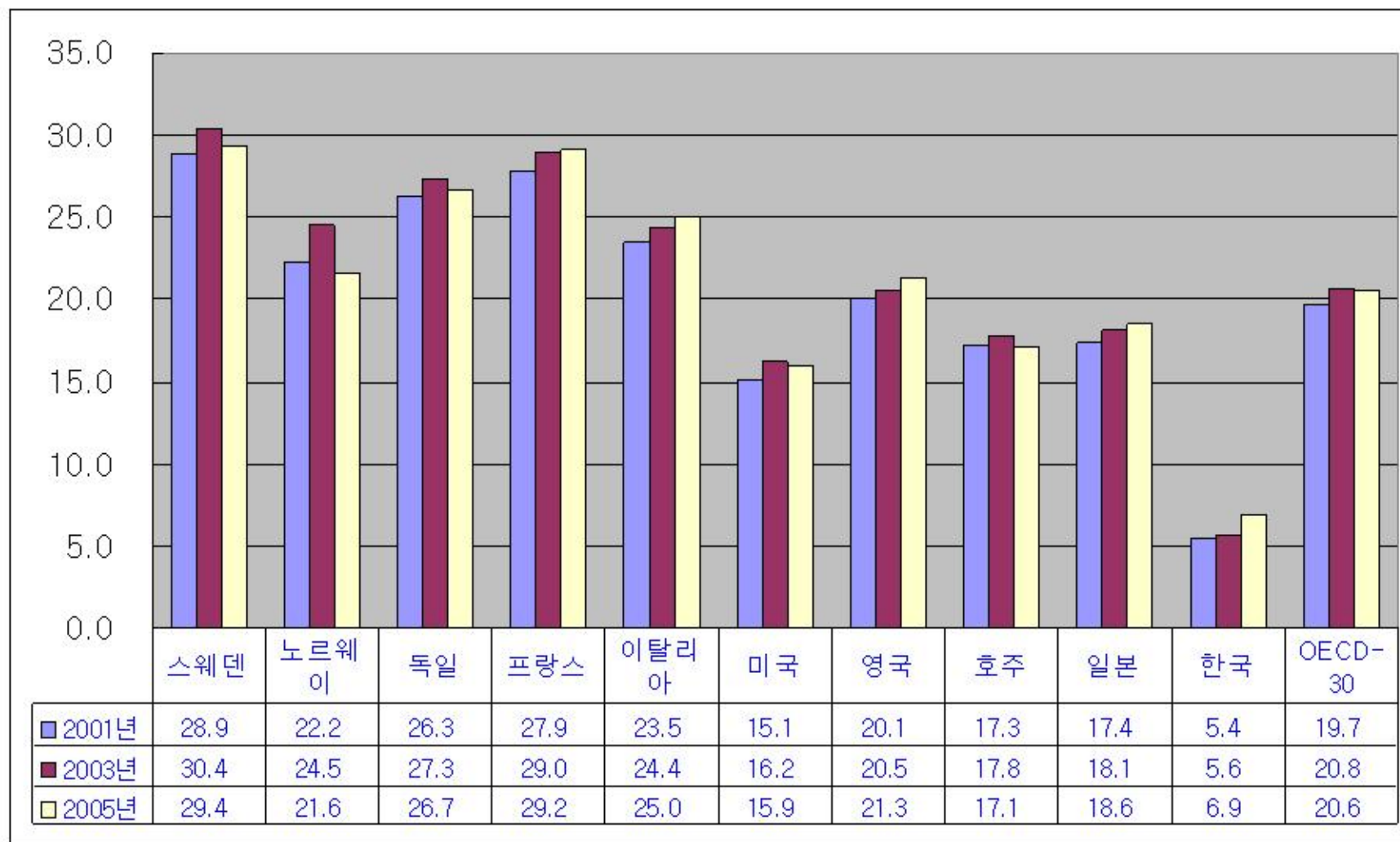
유형		공공부조형	사회보험형	사회서비스통합형
복지국가의 일반적 특성	주요표적대상	극빈자	보험가입자	전국민
	주요정책내용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지출 (국민부담)	GDP대비 15%	GDP 대비 27%	GDP대비 29%
경제적 성과	경제성장률	약 4%	약 1.5%	약 3%
	실업률	약 3~4%선	약 9~10%선	약 5~6%선
사회적 성과	재분배정도	낮음	중간	높음
	중산층크기	작음	중간	큼
정치적 성과	조세저항정도	높음	중간	낮음
	개혁용이성	상향: 높음 하향: 낮음	상향: 높음 하향: 낮음	상향: 높음 하향: 높음

새로운 전략의 사회적·정치적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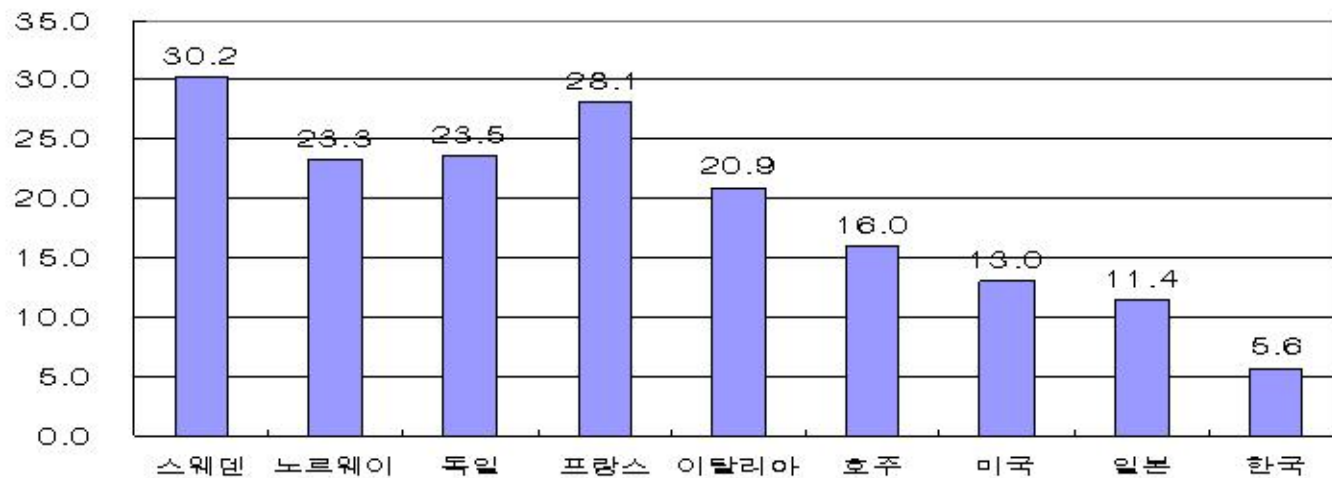
양형	지출구성			조세저항				국민 부담률	지니 계수
	비노인 세대	선별 주인	총사 회지 출	건강	노령 연금	실업 급여	총조 세 저항		
사회 서비스형	0.37 	2.44 	27.96 	0.05	0.06	0.65	0.77 	44.83 	0.26 
사회 보험형	0.33 	2.70 	26.16 	0.16	0.21	1.03	1.40 	43.60 	0.31 
국민 연금조형	0.30 	- 	16.34 	0.07	0.14	1.99	2.19 	30.55 	0.34 

조세저항의
역설

공공사회지출비율 비교 (GDP 대비, SOCX, 2006)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1인당 GDP 1만\$, 1.9만\$ 전후)



〈표〉 지출비중: 현금이전 vs. 사회서비스

		GDP 대비 %		공공사회지출 대비 %	
		현금이전비 중	사회서비스비 중	현금이전비 중	사회서비스비 중
사회서비스 통합형	스웨덴	14.5	13.7	49.2	46.4
	노르웨이	10.9	10.1	50.1	46.4
	독일	15.9	9.9	59.4	37.0
사회보험 형	프랑스	17.5	10.8	60.0	37.0
	이탈리아	16.7	7.7	66.9	30.9
현금이전 공부조	미국	8.0	7.8	50.0	49.2
	호주	8.1	8.7	47.2	50.6
	일본	10.2	8.1	54.9	43.7
	한국	2.9	3.8	42.4	55.7

〈표〉 국민연금 지출 추계에 따른 현금이전과 사회서비스 비중

년도	국민연금지출추계 (백만원)	GDP 대비 %		공공사회지출 대비 %	
		현금이전지출	사회서비스지출	현금이전 지출	사회서비스지출
2007	6,000,000	3.08	2.88	51.64	48.36
2010	11,000,000	3.61	3.00	54.61	45.39
2015	19,000,000	4.59	2.70	62.91	37.09
2020	35,000,000	5.65	2.45	69.71	30.29
2025	64,000,000	6.89	2.29	75.02	24.98
2030	110,000,000	8.42	2.16	79.55	20.45
2040	287,000,000	12.16	1.99	85.92	14.08
2050	528,000,000	15.78	2.00	88.73	11.27

유례 없는 **ultra** 현금이전형

선별주의/보편주의 부문별 지출균형

		공공사회지출 대비 %		
		공공부조성 현금 지출	아동/가족 대상 지출	장애관련 현금급여 지출
사회서비스 통합 형	스웨덴	1.43	10.1	5.2
	노르웨이	1.28	13.4	4.8
	독일	1.72	7.0	2.3
사회보험 형	프랑스	1.30	9.9	2.1
	이탈리아	0.02	4.0	2.1
공공부조 형	미국	1.78	2.6	1.1
	호주	0.11	15.8	2.3
	일본	0.95	3.5	0.7
한국		7.58	1.7	0.5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복지체제 제안

- 현금급여형 소득보장체계 → 사회서비스중시형 생활보장체계
 - 전통 복지국가 개념인 사회보장을 “생애주기상 보편적 욕구파악에 기초한 생활보장” 으로 대체
 - 생활보장=소득보장+서비스보장
- 사회서비스 확충의 재원조달
 - 기본적 인프라 확충: tax
 - 서비스 운영비용: sliding-scale fee for services
 - 저소득층: tax
 - 중산층+: 차등적 기부금
 - 단, 서비스 직접공급자에 대한 익명성 유지가 관건

